

EU의 對한반도 정책

이재승*

EU는 최근 EU집행위의 對아시아 전략 보고서, 한·EU 기본 협정, 對북한 국가 전략보고서 등을 통해서 한반도 정책의 체계적인 원칙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괄적인 한-EU 관계 증진, 남북화해협력 및 긴장완화, 북한과의 대화 및 지원 등에 있어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이는 국제경제·정치에서 강화되고 있는 EU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의 테러국가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남아 있는 가운데 EU의 대북 관계개선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며 EU 내부적으로도 대북지원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EU의 역할은 다분히 제한적이었다. EU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군사,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보완적 차원에서 그 역할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U가 추구해 온 예방외교를 통한 평화정책의 기조는 한반도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EU는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 공조 체제에 EU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EU의 외교정책에 있어 아직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주요국들에 대한 쌍무관계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관심분야는 유럽정치, 국제 정치경제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강한 프랑화의 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4-2, “프랑스의 환율위기관리” 《국제정치논총》 42-2 “Building on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Les Etudes du CERI*, #87 등이다(연락처: 02-3497-7643, e-mail: jslee01@mofat.go.kr).

1. 서론

유럽연합(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1993년 마스트리트 조약의 발효로 EU의 제2의 축(second pillar)으로서의 고유한 법적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았다. 또한 유럽 단일통화의 도입 등으로 한층 가속화된 경제통합은 강화된 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정치적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다. EU는 현재 15개 회원국에서 수년 내로 동유럽 국가의 대다수를 포함하는 거대한 정치체로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¹⁾ EU의 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이처럼 강화되고 있는 EU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를 포함한 EU의 對아시아 관계는 전통적으로 주요한 외교적 관심사항은 아니었다. EU는 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안보관계, 러시아 및 유럽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외교적 관심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와의 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이 주어져 왔다. 외교관계설정에 있어서도 이제까지의 한국과 북한에 대 유럽 관계는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EU는 對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보고서들을 출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와 남·북한과의 대외관계를 통해 EU의 對한반도정책의 특징과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EU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EU의 아시아 정책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의 위상을 정립하고 EU의 對한반도 정책을 對한국, 對북한 정책 및 정치·경제관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 이후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EU의 한반도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EU의 對한반도정책의 주요 고려요소들을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2002년 12월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가 2004년까지 EU 신규가입이 확정되었으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까지 가입을 완료할 전망이다.

2. EU의 對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문제

1) 새로운 對아시아 전략 보고서의 발표

EU 집행위의 대아시아 전략 보고서,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s”²⁾가 2001년 9월 4일에 발표되었다. 이는 1994년 EU집행위의 아시아 전략 보고서인 “Towards a New Asia Strategy”³⁾가 발표된 이래 7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향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EU의 對아시아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침이 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최근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EU의 외교 및 내부정책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내부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 아시아에 있어 EU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확대될 EU의 세계적 위상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2) 對아시아 전략 보고서의 주요내용

1994년 對아시아 전략보고서는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이 지역에서의 EU의 위상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간 정치·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 및 민주주의, 법치, 인권문제의 증진을 지원하는 목표에 대한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의 방안으로 8개의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유럽-아시아 간 양자관계의 강화; (2) 아시아에 있어서 EU의 위상 강화; (3)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협력 지원; (4) 다자협력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 증대 지원; (5) 시장개방과 비차별적 기업 환경 조성; (6) 국가경제체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 (7)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에 기

2) European Commission,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s” Communications from the Commission, COM(2001)469, 2001. 9. 4.

3) European Commission, “Toward a New Asia Strategy” COM(94)314, 1994. 7. 13.

여; (8) 對아시아 관계에 있어 EU 국가간 조율 강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2001년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대아시아 정치·경제 관계 강화, 개발

〈표 1〉 EU의 對아시아 전략보고서(2001)의 주요내용

-
- (1) 아시아와의 평화 및 안보관계 증진
 - 지역 및 세계안보 이슈들에 대한 참여를 강화함.
 - 갈등 예방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
 - 사법 및 내무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
 - (2) 아시아와의 경제, 통상 협력 강화
 - 비관세장벽 완화 및 발전적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해 양자간 경제관계를 강화함.
 - 양 지역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의 활동 및 협력을 지원함.
 - 경제 및 금융 이슈에 대한 정책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화의 국제적 활용을 증진시킴.
 - 아시아의 최빈 개발도상국에게 시장에서의 접근을 보장함.
 - 양자간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교통과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및 이들 이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킴.
 - (3)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촉진
 - 빈곤의 근본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함.
 - 최빈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함.
 - 사회정책이슈들과 관련한 대화를 강화함.
 - EU의 대외원조 관리에 대한 개혁을 완성함.
 - (4)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
 - 민주주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법의 지배확립 지원함.
 -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양자간 및 다자간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대화를 지원함.
 - (5) 아시아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 UN 및 산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
 - WTO를 통한 개방화된 국제통상체제를 강화함.
 - 세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세계화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함.
 - (6) 아시아에 있어서 EU의 전반적인 위상 강화
 - 아시아에서 EC 대표부의 네트워크를 강화 및 확대함.
 - 교육 및 문화교류를 증진함.
 -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교류 및 지적 교류의 활성화를 유도함.
-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s" Communications from the Commission, COM(2001)469, 2001. 9. 4.

원조 확대 등과 같은 기본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소지역별 및 각국별로 구체적인 향후 중점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2001년 보고서에서는 (1) 아시아와의 평화 및 안보관계 증진; (2) 아시아와의 경제, 통상 협력 강화; (3)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촉진; (4)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개선; (5) 아시아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6) 아시아에 있어서 EU의 전반적인 위상 강화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었다. 이의 주요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2001년 보고서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EU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경제 및 통상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개혁 노력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보고서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개방화된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중국과의 관계증진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정치·경제분야에서 중국의 위상 증대를 감안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있어서 지역·세계적 파트너십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및 한-EU 관계에 대한 EU의 기본입장이 제시되었는데, 예전에 비해 한반도 문제를 EU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 보고서는 한국이 경제개혁을 꾸준히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 EU이사회(2000년 10월 11일)의 결정에 따른 인권 존중, 비확산, 경제 개혁 원칙에 의거한 북한과의 대화 증진 및 북한의 초기 경제개혁·개방 지원을 위한 집행위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남북 화해 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양자간 투자 및 교역관계 증진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 WTO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한-EU 관계의 전개

1) 한-EU 정치관계

(1) 한-EU 정치 대화의 증진

EU는 1993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Communication을 발표하며 “정치적 가치의 증진된 공유(increasingly shared political values)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EU의 對한국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협력에서 정치 협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국은 이제까지 EU의 주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 존재해 왔으나 최근 들어 남북화해 과정에 EU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정치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EU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한국과 정치대화와 협력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측은 각료급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왔다.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9년 이후부터는 고위급 회담의 연례 개최로 더욱 보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국과 EU는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연례 각료급 회담을 별도로 개최하였다. 이 대화는 전통적으로 아세안 지역 포럼(ARF) 기간 중에 개최되었다.

EU와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 대화를 점차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를 1996년 기본협력협정의 부속 정치공동선언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양자간 정치대화에 있어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양자간 정치대화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개발 문제는 양자가 공히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문제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ASEM Process는 한국과 EU가 정기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한-EU 기본협정

한-EU 관계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발전은 기본협력협정의 발효이다. 기본협력

협정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협정으로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정치대화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EU 기본 협정은 1996년 10월 28일에 체결된 후,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정치대화, 무역협력, 분야별 협력, 공동위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종래의 통상현안 위주에서 정치적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확대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였다. 기본협력협정에는 무역협력, 농·어업, 해상운송, 조선, 지적재산권, 기술 규제, 경제 및 산업 협력, 마약 및 돈세탁,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문화, 개발원조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인 면으로는 통상조치에 관한 협의조항, 상호합의에 따라 협정의 폭을 확대토록 하는 진보조항, 이행 감독을 위해 연중 한차례의 회의를 갖는 공동위원회의 창설 등이 있다. 한편 정치공동선언은 정치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 연례 각료회의, 전문가회담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이슈에서 EU와의 정치적 공조를 확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9월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4차 ASEM을 계기로 한·EU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아시아 국가중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EU와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4번째 국가가 되었다. 현재 한·EU 정치분야 협의체로는 한·EU Troika 외무장관회담, 한·EU Troika 정무총국장회의(차관보급), 한·EU Troika 실무전문가회의(국장급), 한·EU 정책기획협의회의(국장급), 한·EU 건축전문가회의(과장급) 등이 운영되고 있다.

(3) 대북정책 공조

한반도에 잔존하고 있는 냉전 시대의 긴장은 EU와 한국간 정치 대화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양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정보를 각료급 회담 등 공식,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다. EU와 집행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하고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 및 남북간 직접대화를 지지해 왔다. 1999년 7월 EU는 한반도에 관한 유럽이사회 결정사항을 통해 향후 대북관계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EU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남북 화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

햇빛정책과 관련하여 EU는 2000년 10월 9일, 11월 20일 이사회의 결정사항에서 한반도에 대해 한층 조율된 접근법을 채택했다. EU 집행위 보고서는 남북간 화해, 핵확산 방지, 인권 존중, 북한 내 경제구조개혁 등 국제적 관심사에 대한 북한의 움직임에 맞춰 EU의 지원을 확대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 3월 23-24일 양일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안보, 자유를 향한 EU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01년 5월 4일 페르손 총리, 패튼 집행위원, 솔라나 공동 외교 대표가 평양과 한국을 방문하여 남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가진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커다란 진전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 또한 ASEM 차원에서 EU는 2000년 서울 선언, 2002년 코펜하겐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에 기여하며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할 것을 피력한 바 있다.

국제정세에서 동북 아시아의 지역 안보와 핵확산 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EU는 1997년 9월 KEDO에 참여하였다. 현재 EU는 한국, 일본, 미국과 더불어 KEDO 집행이사회의 회원국이다. 가입 협약에 따라 EU는 2000년 말까지 KEDO에 총 7,500만 유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⁴⁾ EU는 2001년 12월 28일에 5년간 KEDO 가입연장 협정을 발효하였고 동 협약은 EU가 2001년과 2005년 사이 연간 2천만 유로를 새로이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KEDO의 집행이사회 회원국으로서의 EU의 지위가 새롭게 정립되었으며 KEDO 사무국과 산업계약 입찰에 EU 대리권한이 향상되었다.⁵⁾

2) 한-EU 경제관계

한-EU 관계에 있어서는 교역 및 투자를 비롯한 경제관계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EU의 4번째 교역 대상국이며 세계적으로는 15번째 대상국가이다. EU 역시 한국에게 3번째로 큰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다. 또한 EU 기업들은 한국과의 새로운 투자관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걸쳐

4) 이에는 EU 개별 회원국이 추가로 지원한 액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5) Park Sung Hoon, "EU's Basic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ttp://www.fes.or.kr/K_Unification/U-paper5.htm (2002. 8. 21)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가장 큰 외국인 직접투자자가 되어 왔다. 2001년 한국 내 EU 투자는 29억 달러로 한국 내 총 외국인 직접투자의 24.5%를 차지했다.⁶⁾

1997년까지 양자간 쌍무교역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한국에 발발한 경제위기로 인해 쌍무 경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해 유럽의 대 한국 수출은 급속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회복기로 접어들며 교역량이 경제위기 발발 이전 수준으로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하였다.⁷⁾ 유럽의 對한국 무역수지는 1990년 초 흑자기조를 유지하였으나 1998년에 적자로 돌아섰으며, 그 이후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상의 변화는 없었다.⁸⁾

EU와 한국은 무역 자유화 촉진 및 룰에 기반한 교역 체계 강화 등과 관련한 다자간 교역 문제, 특히 WTO와 관련하여 방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쌍무협상시 양측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많은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유사한 성향을 가진 "Friends of the Round" WTO 회원국과 함께 새로운 WTO의 무역 협상 라운드의 출범을 지지한 바 있다.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은 서로 협력 사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농업문제를 포함한 공통이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쌍무무역에 있어 양자간에는 자동차, 조선, 화장품, 반덤핑 등에서 무역 분쟁의 요소가 상당부분 남아있다. 이들 교역 문제 중 조선은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EU는 한국 조선업체가 차입경영에 의한 과잉 설비 투자 이후 대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왔으며 이러한 비시장 지향적 관행은 세계 시장의 왜곡 및 EU 조선 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제약과 화장품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EU는 최근 무역 장벽 완화를 통해 시장 접근 장벽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자동차, 서비스, 농업,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된 오랫동안

6) 이는 미국에 이어 근소한 격차의 2위에 해당한다. 2000년에는 EU가 미국을 제치고 한국에의 가장 큰 직접투자자로 등장했었다.

7) 경제위기 동안 EU 회원국들은 IMF와 한국의 구제금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특별 지원에 나선 바 있으며 경제 정상화에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8) 자세한 내용은 <표 2>를 참조할 것.

9) 조선 문제와 관련하여 EU는 최근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다.

〈표 2〉 한·EU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규모 (백만 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9
수출	15,364	16,864	18,171	20,240	23,424	15,025(△10.8)
수입	21,204	18,983	10,928	12,629	15,788	11,097(△8.0)
총교역량	36,568	35,847	29,099	32,869	39,212	26,122
무역수지	△5,840	△2,119	7,243	7,611	7,635	3,928

2. 주요교역 상대국과의 수출입 비교 (백만 달러)

국가	수출		국가	수입	
	1999	2000		1999	2000
미국	29,474	37,611	일본	24,141	31,828
EU	20,240	23,424	미국	24,922	29,242
일본	15,862	20,466	EU	12,629	15,788
중국	13,684	18,455	중국	8,866	12,789
홍콩	9,048	10,708	사우디아라비아	5,664	9,641
대만	6,345	8,027	호주	4,672	5,958
싱가폴	4,921	5,648	인도네시아	3,986	5,287
말레이시아	3,647	3,515	말레이시아	3,155	4,878
필리핀	3,128	3,360	대만	2,971	4,701

3. 대한민국 투자 동향 (백만 달러)

	1998 금액	1999 금액	2000 금액	2001. 9 금액	누계 금액
EU	2,884(32.6)	6,259(40.3)	4,607(29.4)	2,165(22.3)	22,030
미국	2,974(33.6)	3,746(24.1)	2,916(18.6)	1,825(18.8)	19,738
일본	1,750(5.7)	1,750(11.3)	2,449(15.6)	555(5.7)	11,095
합계	8,852	15,541	15,690	9,712	74,449

* ()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외교통상부

미해결로 남아 있었던 주요 시장 접근 장벽 또한 EU와 한국간 통상 협상의 주요 안건이다.

쌍무 교역 협상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할 때, EU는 EU의 산업 이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WTO의 중재를 요청하여 왔다. 1999년 WTO 패널은 한국 정부의 주류에 부과한 세금은 수입 주류에 대한 차별이라고 EU가 제기한 중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은 국내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수입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여 결국 EU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상당히 개선하였다. 또한 EU가 제기한 다른 중재안에 대해, WTO 패널은 한국이 일부 낙농업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0년 5월 탈지 분유 재료 수입을 자율화한 바 있다.

쌍무 무역 및 투자를 증진시키고 한국시장에서의 성공을 기하기 위해 EU는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Executive Training Programme in Korea"는 한국에서의 6개월 언어 및 기업 인턴쉽 코스를 통해 한국의 언어, 문화, 비즈니스 관행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또한 대한 비즈니스 협력 네트워크(BC-Net)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협력 기회를 포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양자간 소비자 협회, 비즈니스 포럼, 표준 및 인증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한-EU 경제관계는 심화되어가고 있다.

4. 북한-EU관계의 전개

1) 북한-EU 정치관계

북한과 EU는 1998년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정치대화를 가졌다. 15개 회원국 합의로 이루어진 첫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4자회담 등 한반도 안보관련 현안과 북한의 경제개혁, 인권문제, 지원식량 분배투명성 등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북한측은 EU와의 관계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식량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제1차 정치대화는 식량지원 차원에 머물러 오던 양자간

의 관계를 정치분야로 확대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1999년 12월에는 제2차 정치대화가 개최되어 EU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문제, 북한의 인권개선상황, EU의 KEDO지원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2차례 개최된 북한과 EU간 정치대화는 가시적인 성과도출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측간 접촉채널을 정례화시킴으로써 향후 북한-EU관계개선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는 1999년 7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행위 보고서(Council Conclusion on the Korean Peninsula)에서 대북관계의 기본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는 이듬해 11월 재확인되었다. EU는 대북관계 개선에 있어 (1) 북측의 실질적 남북화해 조치 추진 및 관련국과의 대화 병행 추진 여부; (2)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 (3) 인권상황 개선 및 인권관련 UN 협약 준수; (4) 북한주민들의 대외원조 접근 및 외국 NGO의 북한내 활동 보장; (5) 경제개방 및 유럽 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등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북한의 태도변화는 EU의 한반도 문제의 개입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되어 왔다.

또한 EU의 對북한 정책의 기본입장은 2000년 EU집행위가 발표한 對북한 국가전략보고서(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를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EU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북한이 중앙집권화된 사회주의국가이고, 인권수준이 미비하며, 투자·통상여건, 농업부문, 환경, 에너지, 교통 부분 등에서 취약한 경제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對북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는 (1)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역량강화 지원; (2)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및 자원활용; (3) 교통망 정비 및 확충; (4)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평가 기준으로 (1) 기술원조를 수용하고 품질관리와 피드백을 관할할 북한 행정부의 구성; (2) EU측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접근 보장; (3) 훈련 프로그램 이후 시장 경제원리를 이해하고 대외관계의 기술적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북한 전문가의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EU의 對북한 수교의 주요 동기로서는 첫째,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잡으려는 의도를 들

〈표 3〉 對북한 국가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

-
- (1)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역량강화
- 집중적 훈련의 중요성 강조 특히 주요 부서에서 국제금융/통상 및 경제정책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것이 향후 국제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함.
 - 주요한 제도적 장치 및 인력 자원 마련
 - 경제발전계획 수립
 - 빈곤감소
 - 국제사회와의 교류 증진
- (2) 지속가능한 경영체제(sustainable management) 및 자원활용
- 제도 및 관리체제 형성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 및 접근
- (3) 교통망 정비 및 확충
- (4)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프로그램
- *이와 관련한 평가 기준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함.
- 기술원조를 수용하고 품질관리와 피드백을 관할할 북한 행정부의 구성
 - EU측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접근을 보장
 - 훈련 프로그램 이후 시장 경제원리를 이해하고 대외관계의 기술적 복잡성을 처리할 수 있는 북한 전문가의 양성
-

수 있다. 이는 EU의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U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EU는 이제까지 주로 경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한반도에도 적용시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사전에 억제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EU는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향후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경제적 의도도 가지고 있다.¹⁰⁾

북한으로서는 외교전략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의 완고한 자세를 완화시키고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노리는 차원에서 EU와의 수교에 나서고 있으나 미국을 대체할 대화상대로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원조

10) 김학성,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 극동문제 (2001년 7월호).

의 절실함에 비추어 체제에 대한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조자로서의 EU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EU는 2001년 5월 14일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을 발표하였으며,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제외한 EU의 13개 회원국이 북한과 수교를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3개국(독일, 영국, 스웨덴)이 평양주재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는 주한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고 있다.¹¹⁾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01년 5월 31일 남북한 화해와 EU 및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지원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EU의 대북 수교 결정을 환영하며 EU와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대화하기로 공식 결정한 것을 환영하고 NGO,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U 이사회 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의 북한방문은 북-EU 관계 개선에 큰 계기가 되었다. 평양 방문 기간동안 EU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 6월 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EU에게 미사일 실험 중지가 적어도 2003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제네바 핵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은 EU와 인권에 대한 시범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첫번째 회담이 2001년 6월 13일에 개최되었다.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해서 북한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경제 분야에서의 교육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EU의 경제 정책 모델 연구를 위해 고위급 공무원을 유럽에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의 대외무역상 이광근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경제관료들은 2000년 3월에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방문하여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투자은행 및 세계은행 관계자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양자간 교역 및 대북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방문국들은 남북대화 재개의

11) EU 국가들의 대북수교현황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1973. 5. 21), 스웨덴(1973. 5. 25), 핀란드(1973. 6. 1), 오스트리아(1974. 12. 17), 포르투갈(1975. 4. 15), 이탈리아(2000. 4), 영국(2000. 12. 12), 네덜란드(2001. 1. 15), 벨기에(2001. 1. 24), 스페인(2001. 2. 7), 독일(2001. 3. 1), 룩셈부르크(2001. 3. 5), 그리스(2001. 3. 8) EU(2001. 4. 2. 대북수교 의사 발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련의 대화를 통해서 EU는 북한 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정부에 분명히 밝혀 왔다. 인권, 핵확산 금지, 지역 안보문제, 남북관계, 북한의 경제 개혁 등 이러한 이슈들로 지적된다. EU는 이러한 우려 사항에 개선이 없을 경우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라는 원칙을 시사하였다.

2) 북-EU 경제관계

(1) 북-EU 경제교류

교역에 있어서 EU가 북한의 주요 교역상대국이기에는 하나(수출 3위, 수입 2위, 1999) 전체적으로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덴마크(투자보장협정), 스웨덴(무역협정), 독일(항공운수협정 및 청산거래협정), 이탈리아(투자보장협정) 등이 북한과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의 對 EU 주요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의류, 전기부품, 다이아몬드, 기계부품 등이다. 북한의 對 EU 수출품목구조를 보면 EU가 북한의 위탁가공수출의 주요 상대국임을 알 수 있다.¹²⁾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기기, 기계 및 전기부품, 곡물, 차량, 광학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집행위는 2000년 12월 북한산 섬유류에 대한 1,000만 유로 상당액의 수입쿼터를 증액시킨 바 있으며 장기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¹³⁾

EU와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다음과 같은 장애 요인에 의해 진전이 지연되고 있

12) 특기할 만한 것은 북한의 전통적 위탁가공제품인 의류, 전기전자제품 외에도 다이아몬드가 위탁가공수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EU와 북한과의 다이아몬드 교역은 북한의 위탁가공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주로 벨기에와 북한과의 교역으로 벨기에업체가 북한에 원석을 공급하여 북한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이아몬드 교역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3) 그러나 현재 북한은 EU가 확대시킨 섬유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규정된 쿼터를 훨씬 상회하는 물량을 수출하려는 데 반해 북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실이 되기도 한다.

〈표 4〉 북한의 對EU 수출입 현황

(단위: US\$1,000)

구분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2000	2001	증감율(%)	2000	2001	증감율(%)	2000	2001	증감율(%)
독일	25,575	22,756	-11.0	53,575	82,077	53.2	79,150	104,834	32.5
스페인	12,693	12,637	-0.4	15,312	31,626	106.5	28,005	44,263	58.1
영국	1,305	2,034	55.9	25,388	40,713	60.7	26,643	42,747	60.4
아일랜드*	N.A.	5,245	-	0	9,678	-	N.A.	14,923	-
오스트리아	1,979	3,057	54.5	16,454	15,610	-5.1	18,433	18,667	1.3
덴마크	988	3,700	274.5	6,368	12,863	102.0	7,356	16,563	125.2
프랑스	23,972	9,709	-59.5	8,398	6,739	-19.8	32,370	16,448	-49.2
벨기에	5,285	6,762	27.9	11,095	7,559	-31.9	16,380	14,321	-12.6
이탈리아	4,576	2,682	-41.4	12,510	9,678	-22.6	17,086	12,360	-27.7
네델란드	8,910	10,424	17.0	10,179	9,067	-10.9	19,089	19,491	2.1
스웨덴	3,261	899	-72.4	3,577	4,111	14.9	6,838	5,010	-26.7
핀란드	43	215	404.5	615	1,058	72.0	658	1,273	93.5
포르투갈	226	3	-98.7	25	258	932.0	251	261	4.0
그리스	790	182	-77.0	1,250	72	-94.2	2,040	254	-87.5
EU 합계	89,602	80,305	-10.4	164,696	231,109	40.3	254,298	311,414	22.5

자료: 박채복, “유럽연합의 대한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10. 12.

다: (1) 남북관계의 불안정 및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2) 사회간접자본 및 경제인프라의 미비와 이에 따른 고비용; (3) 폐쇄적인 법제도; (4) 외자조달능력 부족; (5) 판로시장의 협소; (6) 무성의한 태도, 뒷돈요구, 관리체제 미흡.

(2) EU의 對북한 원조 및 지원

EU와 북한간의 가장 큰 경제관계는 EU의 식량원조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EU는 북한의 경제 위기로 인한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지속적인 지원을 해 왔다. 심각한 홍수로 인해 북한의 식량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이후 EU는 1995년 최초로 지원을 개시했으며 1997년부터 지속적인 식량 지원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EU는 식량원조, 농업 지원, 식량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 총 2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해왔다. EU의 대북 식량지원은 양자 지원, 세계식량프로그램(WFP), NGO를 통한 지원 등으로 세분화되며, CESVI, Concern, Children's Aid Direct, Action Contra La Faim, German Agro Action, Medecins Sans Frontiere, Triangle 등의 NGO가 주요한 원조활동의 주체들이다. 또한 EU가 식량 원조를 선적할 때는 식량원조의 인도를 모니터하기 위해 현지 기술 지원 인력을 함께 파견하였다. EU는 유엔의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원조를 계속해오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의 지원을 위해서 비료 등을 공급해 왔으며 협동농장에 대한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은 유럽의 NGO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EU는 식량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해오고 있다. EU의 對북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위생, 의료지원, 청정 식수 공급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02년 555만 유로의 인도주의적 지원금을 The ECHO(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Office)를 통해 유럽의 NGO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2001년에 지급한 336만 유로보다 확대된 규모이다. EU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현재 부시 행정부에 비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는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분야로 여기고 있으며 ECHO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까지 2억 8,000만 유로 이상의 지원을 해 왔고 이는 다른 국가의 대북지원의 규모보다 큰 것이다.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기술지원도 이루어져 왔는데 시장경제훈련, 에너지 부문 복구와 농촌개발에 있어서 파일롯트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다.

2000년 10월 9일, 11월 20일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북 지원 활동은 기술적 지원, 북한 수출품에 대한 추가적 시장 접근 가능성 등의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그 첫 단계로 집행위원회는 지난 2001년 12월 북한 섬유제품의 수입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섬유 쿼터를 60%(몇몇 제품의 경우 50%) 증가하기로 결정했으며, 2001년 2월 중순에는 북한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집행위원회, EU 회원국, 주요 자금출원국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주로 시장 경제, 에너지 분야의 재건과 농촌 개발)를 확인하고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의 준비과정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반도 문제 해결주체로서의 EU

1) 9.11테러사태 이후의 변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차원의 체계적인 접근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對아시아 전략, 한-EU 기본협정, 對북한 국가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강화되어 왔다. 이는 EU가 공동외교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EU는 한국과는 교역 및 투자관계 증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한편 기존의 통상관계를 넘어선 정치, 사회, 문화 부문의 포괄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완화 및 대북 지원에서 일정 역할을 분담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인해 북한의 테러국가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남아 있는 가운데 EU의 적극적인 대북 관계개선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EU가 기존에 발표된 對아시아 및 對한반도 정책기조의 근본적인 틀을 재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¹⁴⁾

한편 2000년 이후 EU-북한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EU 내부적으로 대북관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EU와 북한간의 급속한 관계증진은 남북정상회담 및 페르손 총리의 방북 등 일련의 돌파구에 의해서 촉진된 바 있으나, 대북수교가 내용상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북한의 태도변화가 충분히 수반되지 못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실망감이 고조되어 왔으며 EU내에서 원조 피로(donor fatigue)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북지원 형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EU의 지원이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한 순간에 다수의 유럽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14) 기존의 對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기조는 주로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됨에 따라 향후 대북지원에 있어서 양적 및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인권문제등 EU가 요구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양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EU 내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북-EU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EU측에서 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 미사일 및 핵문제 개선, 인권상황 개선, NGO들의 활동 보장 등의 조건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EU의 대북관계는 실행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상당부분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부에 대한 평가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EU 이사회와 집행위의 대북지원 확대는 남북한 화해, 대량과괴무기 확산장치, 인권, 정치·경제개혁 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EU의 정책기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한반도 문제에서의 EU의 역할

최근 미국과 EU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론에 있어 일련의 견해차를 보여 왔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엄격한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EU는 남북정상회의 이후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와 긴장완화 노력을 지속시키는 것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EU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어 보인다. 핵, 비확산 등 군사, 안보이슈와 관련해서 EU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과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왔으며, 솔라나 유럽연합(EU) 외교 및 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북한 관계 개선 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당분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EU측의 자발적인 대북관계의 급속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EU의 한반도문제 개입을 미국과 EU의 역할분담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¹⁵⁾ 미국은 EU의 개입에 대해 두 개의 상충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EU의 개입 및 지원으로 인해 북한이 선부른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 반해 대북 문제에 있어서 EU의 영향력 확대 및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EU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EU의 외교안보정책은 주로 경제적, 외교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분쟁예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세계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부재하며, 유럽 지역 밖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군사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EU는 예방외교의 차원에서 북한과 정치적 대화의 심화와 경제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내부적 동력도 강하지 못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유럽 및 인접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결국 EU는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주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주요한 지원주체로서 단기적으로는 분쟁예방과 평화정착,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EU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와 공조하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개방 촉구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對EU 정책의 새로운 모색

EU의 통합이 심화되고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EU가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對EU 정책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제·통상문제와 정치·안보문제를 연계시켜 논의할 수 있는 정책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15)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또한 EU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양자관계 증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이 경제분야 수준으로 완비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이슈에 관한 한 개별국가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온 바 EU의 주요 국가들과의 정치·안보 및 경제 대화가 EU 차원에서의 접근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북 미수교국인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EU 공동외교안보정책에 영향력이 큰 주요 국가들(프랑스, 영국, 독일) 및 EU 의장국 등을 거점국가화하여 對EU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EU 관계는 경제적 연계의 심화와 대북문제 조율이 향후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EU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교역 및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 등 여러 차원에서 EU의 자본은 이미 한국경제와 깊이 연계되어 있으며 자본세계화 및 자유무역의 증진의 추세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의 확대는 보다 거대한 공동시장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과 EU의 FTA의 득실과 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EU가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인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민감한 정치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할 전망이며 따라서 사안별로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EU는 북한의 유용한 정치적 대화상대로 남아 있으며 EU를 교착상태의 북미관계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의 활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를 한·미·일 공조에 대한 별개의 대안으로 삼기보다는 공동조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EU를 대북조정감독기구(TCOG)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EU의 경제적 지원이 유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對 EU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외교에 있어서 EU의 역할 증진을 모

색해 볼 수 있다. 특히 ASEM을 통한 EU의 對한반도 정책 강화는 제3차 서울 정상회의 및 제4차 코펜하겐 정상회의에서 실효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ASEM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EU와의 유용한 다자외교의 장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UN 등 기존의 국제기구를 통한 EU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ARF에서 EU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1999), 금융기관 부문 아웃소싱 관련 자료.오일환 “북·EU 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북한(2001년 6월호)/
- 김학성(2001년 7월호),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 극동문제.
- 박채복(2002. 10. 12), “유럽연합의 대한외교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염돈재(2001년 봄), “한·EU간 대북협력 공동진출 방안” 경제정책연구, 제3권 1호.
- The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
- European Commission, “Toward a New Asia Strategy” COM(94)314, 94. 7. 13.
- _____,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s” Communications from the Commission, COM(2001)469, 2001. 9. 4.
- _____, “The EC-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
- Park Sung Hoon, “EU’s Basic Strateg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ttp://www.fes.or.kr/K_Unification/U-paper5.htm (2002. 8. 21)

E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Jae-Seung Lee*

The European Union(EU) has intensified it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n recent years as shown in a series of strategy and position papers. The adoption of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and Joint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Dialogue between Korea and the EU enabled a more systematic approach to solve the Korean and inter-Korean issues. The EU has also pursued an active humanitarian aid and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EU's relations with the two Korea reflected a growing influence of the EU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EU's engagement in Korean issues began to stagnate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 The US-North Korea relations were almost freezed as North Korea was regarded as a "terrorist country." Furthermore, critiques have been raised within the EU on the stalling North Korean reform.

It may not be wise to expect the EU to replace the US in dealing with the inter-Korean issues. The EU's eng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limited due to its relative weakness in military and security affairs vis-à-vis the US. However, the EU's engagement in the inter-Korean issues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ve diplomacy in which the EU has been most successful. The EU can also facilitate North Korea's transition to global society and market economy. The EU may join, in the future, in the multilateral coordination on North Korean problem — such as TCOG — together with the US and Japan. Along with the diplomacy with EU,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strengthen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Assistant Professor; European Politics/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02-3497-7643, jslee01@mofat.go.kr

the ties with major European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K since these countries still exert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EU's common foreign policy.